

주간 통일정세

2014-40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군사접촉' 南 태도 비난... "고위급접촉 전도 위태"(10/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공개보도'를 통해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과정에서의 남측 태도를 비난하고 "일정에 오른 북남고위급접촉 개최의 전도가 위태롭게 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온겨레가 엄한 시선으로 차후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함.
 - 통신은 또한 지난 7일 서해상에서 남북 함정 간 상호 총격 직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서'를 보내 "이번 사태를 수습할 목적으로 귀하와의 긴급단독접촉을 가질 것을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혔음을 전함.
 - 이어 매체는 북측이 이번 접촉을 공개로 하자고 했으나 남측에서 비공개를 요구했다며 "(접촉의) 전말을 공개해 남조선 당국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가를 보여주기로 했다"고 덧붙임.

- 北, 박대통령 아셈 발언 실명 비난... "정치적 도발"(10/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1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이것(박 대통령 발언)은 우리에게 대한 또 하나의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도발이며 모처럼 마련된 북남 대화의 분위기를 망치게 하는 엄중한 망발"이라고 밝힘.
 - 이어 "박근혜는 입을 잘못 놀리는 그 악습 때문에 북남관계를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박근혜가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그에 저해를 주는 언행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연일 대남 압박...“빠라 중지 실제적 조치” 요구(10/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무분별한 망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은 내외의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인간쓰레기들의 빠라 살포 광란을 중지시키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어 "반공화국 빠라 살포 망동은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날로 격화시키고 무력 충돌과 나아가서 전쟁까지 몰아오는 엄중한 적대행위"라며 "빠라 살포 망동이 북남관계에 최악의 장애물로 되고 있다"고 지적함.

- “공동선언 이행하면 이산상봉·협력사업도 해결”(10/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북남 선언들의 이행은 시대의 요구, 겨레의 지향'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함.
 - 이어 신문은 "현 시기 북남관계의 유일한 타개책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이라며 "북남 선언들이 성실히 이행되면 관계 개선의 흐름을 타고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뿐 아니라 평화 보장과 협력사업 등 모든 문제가 겨레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보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또한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긴장 완화와 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으로 실천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임.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남북 군사당국자 비공개접촉(10/1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사실을 전했으며, 남측은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북측은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힘.
 - 이어 뉴스는 김영철이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때 우리 군당국이 '북한에 의한

- 폭침'이라고 밝히며 당시 김격식 4군단장과 함께 배후로 지목한 인물임을 전함.
- 매체는 또한 이번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에 북한 대표로 참석한 리선권 국방위 정책국장도 2007년 5~7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김영철과 함께 참석해 남측 대표단과 얼굴을 맞댄 적이 있다고 덧붙임.

■ 北, 남북 군사당국자접촉 이틀째 보도 안해...(10/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이 군사당국자 접촉 다음날인 16일 정오까지 접촉이 열렸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함.
- 신문은 이어 북한이 성과 없이 끝난 군사당국자접촉에 대해 보도하지 않은 것은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덧붙임.

■ “北, 지난 7일 전통문에서 '긴급 단독접촉' 제의”(10/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남북 함정 교전과 관련해 지난 7일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명의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보낸 전통문에서 '긴급 단독 접촉'을 우리측에 제의했었다고 16일 전함.

라. 대남 군사 관계

■ 남북, 파주 군사분계선 인근서 총격전(10/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합참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9일 "오늘 오전 8시10분부터 북한군 10여명이 경기도 파주지역, 판문점 서쪽에서 6km 떨어진 DMZ 내 MDL에 접근함에 따라 대응지침에 의거해 7차례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면 사격하겠다'는 내용의 경고방송을 실시했다"며 "오후 5시40분께 재차 파주지역 MDL로 접근하는 북한군에 대해 우리 군이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격을 했다"고 밝힘.
- 뉴스는 이어 북한군이 GP에 배치된 기관총으로 사격을 했고, 우리 군도 GP에서 기관총 수습 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임.

마. 남북 경제 관계

- 北, 南서 열린 국제대회 참가 선수단 비용 첫 지불(10/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통일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 등의 비용으로 총 19만1천682달러(한화 2억300여만 원)를 지난 3일 우리 측에 지불했다고 보도함.
 - 이어 뉴스는 통일부 관계자가 16일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 체육대회에 참가해 입촌료 등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먹고 자는 비용은 본인들이 다 지불했다"고 전했음을 덧붙임.

바. 남북 사회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금강산 신계사 복원 7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 10월 13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진행(10.13, 중앙통신)
-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10.17)을 통해 대통령의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대북발언(北의 진정한 변화 등)에 대해 '북남대화의 분위기를 망치게 하는 엄중한 망발'이라며 '입을 잘못 놀리는 그 악습 때문에 북남관계를 망칠 수 있다'고 대통령 실명 비난(10.18, 중앙통신·중앙방송)
-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北 핵개발 등 병진노선·인권문제 지적 및 국제사회 공동대응' 등 발언에 대해 "정치청맹과니·민족반역자"라고 비난 및 '병진노선 정당성' 강변(10.18, 중앙통신)
- "남조선 군부당국이 선제공격 무력증강 책동에 광분 한다"며 해병대의 고속기동수단을 갖춘 전투부대 추진과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대 추가 확보 계획 등 KBS 방송 인용 비난(10.18, 중앙통신)
- 韓美안보협의회 개최(새로운 작전계획 개념과 원칙 합의계획, 워싱턴) 예정 관련 '우리의 자위적 조치들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조선반도를 핵전쟁의 위험 속에 더욱 깊숙이 빠뜨리기 위한 모험전쟁, 냉전확대계획'이라고 비난(10.19,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북 영변 원자로 가동 일시중단" 거듭 밝혀(10/1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3일(현지시간) ISIS 홈페이지를 인용해 북 영변 원자로 가동이 일시중단 되었음을 전했고 "그러나 이는 원자로 가동을 영구 중단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덧붙임.
 - 이어 뉴스는 이 기관이 "영변 원자로는 앞으로 재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증거는 냉각수의 방출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을 보도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北 신문 "NPT 조약 불필요...美 핵독점 위한 것" 비난(10/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존재가 "불필요하다"며 현재 NPT가 "미국 등의 핵 독점을 고수하고 그 특권체제를 법제화하려는 것"이라 비난함.
 - 신문은 이어 "미국이 NPT를 한사코 유지해보려는 것은 날이 갈수록 커가는 핵 불안증, 핵 공포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라며 NPT는 "비핵국가들에만 올가미를 걸어놓은 가장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강조함.
 - 매체는 또 "미국은 반미자주적인 비핵국가들에 대해 (평화적 핵활동) 권리를 빼앗기 위해 핵무기로 위협공갈한다"라며 "우리나라가 비핵국가로 있을 때에 그 첫 번째 대상이었고 지금은 이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 중국 매체 통해 서방의 '인권 지적' 반박(10/16, 환구시보)
 -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이 자사에 '북한 인권보고' 중문판 전문을 보내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소개했다고 16일 전함.
 - 신문은 북한이 이 보고서에서 "반북(反北) 적대세력이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고 있으나 여러 오류들이 있다"며 "진상은 결국 밝혀질 것이며 어떤 것으로도 (진상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음을 보도함.
 - 이어 신문은 북한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정치적 목조르기, 군사적 압박, 경제적

고립, 핵 소동 선동 등 음모를 벌이고 있다"며 "그의 추종세력들도 국제사회에서 반북 인권 과도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임.

- 北, 美 '핵사용 계획' 공언 패네타 회고록 연일 비난(10/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매체에 처음으로 등장한 '북침핵전쟁연습반대 전민족비상 대책위원회'라는 단체의 대변인 담화를 인용해 패네타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지적하며 "미국이 남조선과 우리에게 대한 핵 선제타격을 노린 '맞춤형 억제전략'의 완성을 다그치는 때 핵무기 사용계획을 공개한 것은 사실상 핵전쟁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음을 전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北 "6·25 미군 유해 나뒹군다...발굴 중단 美 책임"(10/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조선인민군 관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에서 척 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19일 미군 유해 발굴이 중단된 책임을 북한에 돌리는 발언을 했다고 발굴 작업은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인 위성 발사를 도발로 걸고든 미국의 날강도적이고 일방적인 처사에 의해 중단된 것"이라고 밝힘.
 - 통신은 이어 "역사는 날강도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조미(북미) 쌍방이 합의한 미군 유해 발굴 문제와 같은 인도주의 사업조차 무지막지하게 파탄시킨 미 행정부의 반인륜적 범죄를 두고두고 저주하며 단죄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함.
- 재미 한인단체, 내달 평양서 '국제환경포럼' 개최(10/16,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방송은 16일 미국 뉴저지에 본부가 있는 비영리단체 '원 그린 코리아 무브먼트'(OGKM)의 이춘호 사무총장이 내달 19일 포럼을 연다며 "평양 포럼을 통해 북한의 산림화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음을 보도함.

마. 대중국

- **申시진핑, 김정은에 '짧은' 답전...친선관계 언급 없어(10/17,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신중국 건립 기념일(10월 1일)을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보낸 축전에 대한 답전을 보냈다고 17일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도 시 주석이 리커창(李克強)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함께 지난 13일 김 제1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에게 답전을 보내왔다고 17일 보도함.
 - 통신은 시 주석이 '답전'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65돌에 즈음해 당신들이 축전을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융성번영과 조선인민의 행복을 축원한다"고만 전했다는 보도함.

바. 대일본

- **납치문제 재조사 논의 관련...와다 하루키 교수 전해(10/13,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가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와 관련해 언제든지 일본 당국자의 방북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는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가 13일 밝혔음을 보도함.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北 신문, 유엔 비난..."내정간섭 말아야"(10/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유엔은 군주제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엔은 군주제가 아니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원로원이 아니다"라며 유엔이 각국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해선 안 된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어 "유엔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책임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세계는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주의적인 기구인 유엔에 등을 돌려낼 것"이라고 덧붙임.
- 북한, 유엔서 자체 '인권결의안' 초안 회람시켜(10/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유엔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 유엔대표부가 15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각국 대표 6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비공개 설명회를 열어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켰고 설명회는 15분간 진행됐다고 보도함.
 - 신문은 또 북한이 초안에서 "인권 문제가 정치화되면 안 되고, 인권 문제에서는 이중기준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요지로 주장했음을 전함.

자. 기타 국가

- 평양 주재 브라질 대사 "대북제재, 北 변화에 장애물"(10/17, 미국의소리(VOA))
 - 호베르투 콜린 평양 주재 브라질 대사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 제재는 북한 변화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음을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함.
 - 방송은 콜린 대사가 지난 15일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변화는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일어나야 한다"며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도와야 한다"고 밝혔음을 전함.
 - 또한 방송은 브라질이 2010년 시작한 북한과의 농업 분야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두 나라 사이의 축구, 문화 교류, 평양과학기술대학과의 협력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임.
- 방북 뉴질랜드 외교관 "평양 활기찬 모습에 놀랐다"(10/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의 에린 던컨 2등 서기관이 지난 13일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페이스북에 올린 북한 방문기를 인용해 "평양에 머무는 동안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거리의 분주함이었다"고 회고했음을 전함.
 - 뉴스는 또한 "평양의 많은 주민들은 (외국의) 다른 도시들처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바빴다"며 원산에서도 분주한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묘사했음을 덧붙임.

- 北 철도성대표단(단장: 전길수 철도상), 10월 13일 국제토론회(러시아 소치)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 출발(10.13, 중앙통신·중앙방송)
- 駐北 몽골대사(마니바드라힌 간볼드), 10월 13일 강석주(黨비서) 등을 초대한 가운데 '노동당 창건 69돌 즈음 연회 마련(10.13, 중앙통신·중앙방송)
- 스위스조선위 위원장과 일행, 10월 13일 「반제민전」 평양지부 방문(10.13, 중앙통신)
- 김정일화전시회, 10월 7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막(10.14, 중앙통신)
-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사건(백인 경찰의 총격으로 흑인 청년 사망)을 거론하며 "미국이 부르짖는 '만민평등'과 '인권옹호'란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기 위한 면사포에 지나지 않는다"며 '미국은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논하기 전에 제 코부터 씻는 것이 옳은 처사'라고 비난(10.14, 중앙통신)
-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10월 14일 주북 베트남 신임대사(팜 비엣 흥)와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10.14,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평화옹호조선국민족위 대변인 성명(10.16)】 美 전 국방장관 회고록에 수록된 '한반도 유사시 핵무기 사용계획' 내용을 거론하며 '핵선제타격을 노린 극히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핵전쟁각본'이라고 비난 및 '북침핵전쟁책동 저지' 투쟁 선동(10.16,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駐에리트레아 北 대사 '박춘일', 10월 10일 주재국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출(10.16, 중앙방송)
- 베트남-北 친선협회, 10월 16일 김정은에게 선물 전달(10.17, 중앙통신)
- 재일동포조국 방문단(단장 : 박재화, 김룡원), 10월 17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10.17,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이 現 시점(남북관계의 개선·파국 갈림길)에서 前 美 국방장관(패네타) 회고록(한반도 유사시 핵무기 사용 계획) 공개는 '한반도 핵문제를 부각시키고 괴뢰당국을 부추겨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려는 불순한 기도가 깔려 있다'며 '핵억제력 더욱 강화' 강조(10.18, 중앙통신·노동신문)
- 러시아 나훗카 주재 北 총영사관(10.10)과 하바롭스크 주재 北 총영사관지부(10.14)에서 '北-러시아 수교(10.12) 66주년 연회 개최(10.18, 중앙통신·중앙방송)
- 네팔 박타푸르市 친선대표단(10.13 訪北), 10월 18일 만경대 방문 및 주체사상탑·당창건기념탑 등 참관(10.18, 중앙통신·중앙방송)
-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의 마수가 청년들에게 뻗치고 있다'며 '진보적 나라들의 청년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의 본질과 위험성을 똑바로 꿰뚫어보고 짓부셔 버리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선동(10.19, 중앙통신·노동신문)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영국주재 북한대사 "김정은 제1위원장 건강하다"(10/1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대사가 1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둘러싼 건강 이상설을 부인했다고 보도함.
- 공개행보 북한 김정은, 위 축소 수술설(10/14, 데일리메일)
 -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김 제1위원장이 베이징의 병원에 수주 간 머물며 위의 크기를 줄이는 위 밴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어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의 과체중에 따른 심각한 건강 위협으로 위 밴드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회복 치료를 받느라 비중이 큰 당 창건일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40일 만에 지팡이 짚고 등장(10/14,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14일 1~3면에 김 제1위원장의 위성과학자주택지구 현지시찰 사진을 공개하며, 신문1면에 그가 지팡이를 짚고 앉아있거나 걷는 모습의 사진을 여러 장 실음.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 제1위원장이 찾은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 사상이 그대로 터전이 되고 과학자들에 대한 어머니당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이 주춧돌"로 평가함.
- 40일만에 등장한 北 김정은,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시찰(10/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1면 기사에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냈다"라며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간호사 김은숙 등 20명에게 감사가 전달됐다고 전함.
 - 또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의 감사를 받은 주민들은 건설현장에서 의료봉사활동을 벌이거나 노력지원, 물질적 지원을 했다고 밝힘.

- 北 "정말 뵈고싶었다!"...김정은 재등장 '감격' 선전(10/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재등장에 환호하는 각계 주민들의 반응을 신문 2면 전체에 담아 전함.
 - 신문은 16일 2~3면을 김 제1위원장의 재등장에 관한 글로 채우며 '햇빛같은 미소'라는 제목의 글에서 "10월 14일부 노동신문을 통해 새로 일떠선(건설된)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께서 환히 웃으시는 모습을 보었을 때 인민들은 환성을 터쳤다"고 밝힘.
 - 신문은 또 '인민의 결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군로신일'(君勞臣逸)이라는 사자성어를 내세워 김 제1위원장의 '노고'를 부각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께서는 신로군일(臣勞君逸)의 역사를 군로신일의 역사로 바꿔놓으셨다"며 "오로지 조국이 부강번영을 위해 발이 닳도록 쉬 없이 전선 길, 현지지도 길을 걸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라고 칭송함.

- 北김정은 사흘 만에 또 등장...건강이상설 '불 끄기'(10/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1면과 2면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평양 도심의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아파트 현지도 소식과 함께 관련 사진 9장을 게재함.
 - 또한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김책공대 교육자 아파트를 둘러보며 "교육자들이 행복하게 살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고 "새집들이를 빨리 하라"며 '가정 방문'까지 약속했다고 보도함.

- 北 김정은, 공군 비행훈련 시찰...인천AG 선수도 격려(10/19,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와 제458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도로비행장 이착륙 훈련을 현지도했다고 19일 보도했으나 정확한 현지도 날짜는 밝히지 않음.
 - 노동신문은 19일 지팡이를 짚고 훈련을 참관하는 김 제1위원장의 사진을 1면에 실음.
 - 이번 군부대 시찰에는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오일정 당 민방위부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등이 동행했으며 최학성 항공 및 반항공군 참모장이 이들을 맞이함.
 - 김 제1위원장은 전투비행사들이 높은 비행 기술을 갖췄다고 평가하고 비행훈련을 더욱 강화해 '극악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현대전에 능숙히 대처할

- 수 있는 '하늘의 결사대'로 비행사들을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최근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감독들을 만났다고 19일 보도하면서 김 제1위원장이 선수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사진을 게재함.
 - 노동신문 2면에는 김 제1위원장이 지팡이를 짚은 채 선수들과 악수를 하며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진이 실렸다. 김 제1위원장은 선수들과 팔짱을 끼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는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음.
 - 이 자리에는 황병서, 최룡해, 오일정, 한광상, 박명철 최고재판소장, 김영훈 체육상, 오금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리종무 군 중장 등이 김 제1위원장을 수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박봉주 총리, 방북 오라스콤 회장 면담(10/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박봉주 동지는 1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 온 사위리스 이집트 오라스콤전기통신수단 및 기술주식회사 이사장과 일행을 만나 담화를 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이 어떤 내용의 담화를 나눴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 北 김영남, 아프리카 순방 예정(10/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가 에티오피아, 수단, 콩고 등 일부 아프리카 나라들을 곧 공식 친선방문하게 된다"고 짚막하게 보도함.

다. 공식 행사

- 북한 '전국도대항 군중체육대회-14' 폐막(10/13,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10월 1일부터 열흘간 평양에서 열린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가 체육 열풍을 더욱 고조시켰다면서 "전국의 12개 도(직할시)들에서 선발된 수많은 선수들과 응원단들이 참가해 자기 지역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경기를 진행했다"고 전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음을 보도함.
- 北 위성과학자 주택지구 준공식 개최(10/17,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7일 위성과학자 주택지구 준공식 개최 소식을 전하며 "당의 과학 중시 인재 중시 정책의 빛나는 결실인 위성과학자 주택지구는 사회주의 문명국 체모에 맞는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이라고 강조함.
 - TV는 박봉주 내각 총리가 준공사에서 "위성과학자 주택지구는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안아온 위대한 창조물"이라며 "모든 과학자들과 일꾼들이 눈부신 과학기술 성과로 부강조국 건설 위업에 적극 기여하리라고 굳게 믿는다"라고 말했음을 보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체육은 사회의 활력소"...대중체육 활성화 독려(10/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온 나라에 체육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체육은 온 사회에 약동하는 분위기가 차 넘치게 하고 사람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고조시키는 데서도 커다란 작용을 한다"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방대한 과업이 나설수록 힘을 넣어야 하는 것이 체육사업"이라고 보도함.
 - 신문은 특히 "평화시기에 다른 나라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리는 것은 체육밖에 없다"며 "우리나라를 정치와 군사, 경제 분야에서뿐 아니라 체육 분야에서까

지 세계적인 강국으로 떨치시려는 것이 김정은 동지의 뜻"이라고 언급하고 체육 열풍을 일으키기 위해 체육인들과 국가체육지도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함.

- 김일성父子 혁명사적표식비와 현지지도표식비, 함경남도 여러 단위들에 건립(10.13, 중앙통신)
- 제6차 전국 대학생 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 폐막식, 10월 14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10.14, 중앙통신·중앙방송)
- 함경남도, 신흥군 삼부연지구에 명승지와 휴양소 건설(10.14, 중앙방송)
- 北 내각, 10월 15일 옥류관에서 김평해(黨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김영훈(체육상) 등 참가한 가운데 '제45차 기계제조 세메선수권대회(중국 난징) 우승 홍은장·리세광 선수를 위한 축하 연회 개최(10.15, 중앙통신·중앙방송)
- 전국 전력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주최), 10.15~16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진행(10.16,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각지 인민들,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 역량 집중(10.16, 중앙통신)
- '타도제국주의동맹'(「트.ㄷ」) 결성(10.17) 88주년을 맞아 '「트.ㄷ」는 노동당의 뿌리이고 조선혁명의 승리의 기치'라며 '모두다 당의 영도따라 「트.ㄷ」의 깃발을 더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 위업의 중국적 승리를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10.17,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좋은 일을 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인민보안부 군관 박철홍, 경안산 은하피복공장 노동자 림은향 등)에게 감사 전달(10.18, 중앙방송)
- 北, 평양을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도로포장, 다리 보수, 공원 건설 등)이 힘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10.17, 중앙통신)
- 北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박봉주(내각 총리)·김용진(내각 부총리, 첫째 안건 보고)·임철웅(내각 부총리, 둘째 안건 보고) 등 참석한 가운데 '안건 보고 및 토론' 등 진행(10.18, 중앙통신)
-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평양 대동강변) 준공식, 10월 18일 박봉주(내각 총리)·최태복(黨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김수길(평양시黨 책임비서)·김승두(교육위원장)·홍수현(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 등 참석한 가운데 진행(10.18,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정일 저작(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발표(10.16) 20주년 관련 김정일의 "수령의 사상과 위업계승 업적" 칭송 및 쏘민의 "김정은 영도따라 혁명위업 완성" 강조(10.18,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일성·김정일 형상 모자이크벽화, 철원·판교·법동군 고성군 봉화리에 건립 및 해당 단위들에서 준공식 각각 진행(10.18, 중앙통신)
- 리보익(김일성 조모) 사망(10.18) 55주기 즈음 '이보익의 애국, 애족, 애민 정신과 反日혁명 투쟁사' 등 칭송(10.18, 중앙방송·노동신문·중앙통신)
- 「조선적십자회」 창립일(46.10.18) 즈음 "국가의 적극적인 방조자로서의 사망과 임무를 수행했다"고 지난 기간 활동(대중보건위생 구호사업 등) 소개 및 '적십자 국제기구들과 친선협조관계 발전 추진' 강조(10.18, 중앙통신)
- 평양시 도로 8만 1,600㎡ 포장 등 "선군문화의 중심으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 추진 성과" 및 홍건도간석지 건설장에서 '10만산 대발파 성과적 진행' 선전(10.18,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보내준 선물 전달모임, 10월 19일 최태복(黨 비서)가 참가한 가운데 국가과학원에서 진행(10.19, 중앙통신)
- 양강도 광업연합기업소 문흥광산, 해발 950m 산중에 '양어장'을 건설하여 후방사업을 개선(10.19, 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북한 "경제특구 투자자 위해 원스톱 서비스 도입"(10/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 대외경제성 국가경제개발총국 김정식 과장이 17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열린 북·중 경제무역포럼에서 북한 경제특구의 투자 환경을 설명하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함.
 - 뉴스는 이어 김 과장이 특히 "앞으로 개발구 관련 인원과 물자의 출입국 수속을 간소화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도입되고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투자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기업 환경과 조건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음을 덧붙였다.

나. 주요 후속 조치

- 북한, 평안북도 동림군 중국인 관광객에 개방(10/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중이 16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시에서 북한 신의주시·동림군 이틀 관광코스 개통 기념식을 개최했으며 16일 행사에는 북한 측에서 홍길남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 측에서 판샹(潘爽) 단둥시 부시장이 대표로 참석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이 자리에서 홍인철 북한 국가관광총국 정보조사국 부국장이 "조선(북한)의 관광산업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영도 아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마식령 스키장과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 등 최근 새로 건립하거나 리모델링한 자국 내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고 전함.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관계

- 北, 상반기 스위스산 담배제조기 부품 수입 대폭 늘려(10/1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5일 코트라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2014년 상반기 스위스-북한 무역동향'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은 올해 상반기 스위스산 '담배 제조기 부분품'을 18만 달러(약 1억9천만원) 어치 수입했다고 전함.

- 제3회 북·중 종합박람회 단동서 개막(10/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랴오닝성 대외우호협회, 단동시 정부와 박람회를 공동 주최하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단동시위원회가 올해 박람회에 북한 측에서 100개 무역업체 관계자 300여 명을 비롯해 문화예술 공연단 90여 명과 여행사 관계자,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고 밝혔음을 보도함.
 - 뉴스는 또 박람회가 16일 오후 7시30분(현지시간) 단둥 랑터우(浪頭)신개발구 체육관에서 열리는 북한 평안북도예술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계속된다고 전함.

- 완공 앞둔 신압록강대교...“개통시점은 불투명”(10/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6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신압록강대교 공사 현장에서 만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공식적으로 이달 말 준공 예정인 대교의 실질적인 개통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함.

- 최근 국가과학원 연구사들의 연구 성과들(기계공학연구소 연구집단 등, 우주유압축기용 피스톤가락지 생산기술 전수 등)이 "인민경제와 과학기술 및 교육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소개 선전(10.15,중앙통신)
- '세계 식량의 날(10.16)'을 맞아 '남에게 기대를 걸어서는 언젠가도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자기 인민의 힘을 발동하는 농업정책을 실시한다면 식량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고 독려(10.16,중앙방송·노동신문)
- 황해남도 농촌들, '벼가을' 완료(10.17,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탈북자 6명, 라오스 북부에서 체포돼(10/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라오스에서 활동 중인 한 탈북지원단체의 말을 인용해 탈북자 6명이 16일 낮(현지시각) 북부 루앙남타 지역의 한 검문소에서 경찰에 붙잡혀 수감됐다고 밝힘.
 - 뉴스는 이들 가운데 4명은 20~30대 여성, 나머지 2명은 40대 남성과 여성 각각 1명이라며 각자 개별적으로 북한을 탈출했음을 덧붙임.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北 주민 올해 영양상태 소폭 개선"(10/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4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2014 세계 굶주림 지수'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북한의 굶주림 지수는 16.4로, 작년의 18보다 소폭 낮아졌다고 보도함.
 - 뉴스는 북한의 올해 굶주림 지수는 네팔(16.4), 타지키스탄(16.4), 케냐(16.5),

짐바브웨(16.5)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임.

- 北TV, 여자축구 다룬 북한판 '우생순' 3년 만에 재방(10/13, 조선중앙TV; 10/1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조선중앙TV가 지난 13일 오후 4시께 연속극 '우리 여자축구팀' 제1부를 방영한 데 이어 14일에도 같은 시간에 제2부를 내보냈다고 전함.
- "北근로자 5명 중동서 밀주·마약 혐의 체포"(10/17,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 소리(VOA)는 중동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5명이 이달 초 밀주 판매와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으며 일부는 추방됐다고 17일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가구제품·일용품 도안전시회(9.10~12월초까지), 매일 수많은 애호가들과 시민들로 흥성이고 있다고 선전(10.13, 중앙통신)
- 「세계 손 씻기의 날(10.15)」 관련 김철만(도시경영성 국장) 출연,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중요성(건강 담보와 온갖 질병들 발생·전파 예방)' 강조 및 평양(10.15, 경상유치원)과 봉산군(황해북도)에서 행사 진행 전언(10.15, 중앙통신·중앙방송)
- 문수물놀이장 준공('13.10.15) 1주년, '실내·외 물놀이 및 편의봉사시설' 등 소개 및 "지난 1년간 88만여 명의 각계층 근로자·청소년학생·해외동포·외국인들 방문 휴식" 선전(10.15, 중앙통신)
- 제19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2015.8.24~9.1, 평양 개최 예정) 상징마크와 상징동물 도안(태권도복을 입은 호랑이) 출시(10.17, 중앙통신)
- 北 축구, '2014 AFC U-19 챔피언십'에서 일본을 꺾고 준결승 진출(10.18, 중앙통신)
- 전국바둑애호가경기(평양과 각 도·직할시에서 선발된 200여 명의 남여선수 참가), 10월 18일 평양 태권도전당에서 개막 및 10월 22일까지 진행(10.18, 중앙통신)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미국 ISIS "북 영변 원자로 가동 일시중단" 거듭 밝혀 (10/13, 연합뉴스)
 - 미국의 핵군축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소장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는 북한 영변의 5MW급 원자로 가동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영변 원자로 가동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여전히 판단하고 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국시간으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아직도 (영변 원자로를) 계속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고, 조보근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장도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가동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함.
 - ISIS는 "윤 장관의 발언은 영변 원자로의 가동상태를 장기적 관점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도 원자로가 영구 중단됐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며, 그러나 "우리가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원자로 냉각 과정에서 배출되던 증기와 냉각수가 된 위성사진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마크 토콜라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추진과 병행 가능" (10/14, 연합뉴스)
 - 주한미국 부대사를 역임한 마크 토콜라 신임 한미경제연구소(KEI) 부소장은 13일(현지시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의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힘.
 - 토콜라 부소장은 "북한이 비핵화의 초점에서 이탈하려고 할 위험성은 상존하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동시에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미국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를 최우선시하는 정책기조와 반드시 배치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정책적 차이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함.
 - 그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남북한이 최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이후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남북 간

충격전이 벌어지기는 했으나 이것은 지난 수년간 북한이 보여온 통상적 대응이었던 만큼 관계개선의 기회를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당국자 "비핵화 없이 지속적 평화안정 실현불가" (10/17, 연합뉴스)
 - 중국의 6자회담 차석대표인 쉬부(徐步) 외교부 한반도사무 부대표는 17일 "반도(한반도)의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에서 지속할 수 있는 평화·안정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언급함.
 - 쉬 부대표는 이날 오전 베이징대에서 열린 '한중관계 대화 포럼'에 참석해서 한 강연에서 "우리는 반도의 비핵화와 반도의 평화·안정은 상호관련이 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으며, 이어 "핵문제 발생의 직접적 원인은 북한 자신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핵보유는 북한 정권의 안보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함.
 - 이는 중국 정부가 북핵해결을 '한반도 안정'을 위한 최우선 해결과제로 설정해놓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판단됨.

나. 미·북 관계

- 北 신문 "NPT 조약 불필요...美 핵독점 위한 것" 비난 (10/14,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존재가 "불필요 하다"며 현재 NPT가 "미국 등의 핵 독점을 고수하고 그 특권체제를 법제화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함.
 - 또한, "미국이 NPT를 한사코 유지해보려는 것은 날이 갈수록 커가는 핵 불안증, 핵 공포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라며 NPT는 "비핵국가들에만 올라미를 걸어놓은 가장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강조함.
 - 특히 "미국은 반미자주적인 비핵국가들에 대해 (평화적 핵활동) 권리를 빼앗기 위해 핵무기로 위협공갈한다"라며 "우리나라가 비핵국가로 있을 때에 그 첫 번째 대상이었고 지금은 이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해 핵보유국이 됐다"며 "NPT 제도를 붕괴시키고 있는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 자신에게 있다"고 역설함.

- 킹 특사 "북한은 '왕따국가'...여행하지 마라" (10/18,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인권 특사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비판하면서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공개 촉구함.
 - 킹 특사는 이날 한미경제연구소(KEI)와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KEI 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 인권법 제정 10주년' 토론회에서 "최근 (미국 등 서방의) 북한 여행객이 늘고 있는데 이는 문제다"라면서 이같이 밝힘.
 -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탈북자 조진혜씨는 이미 3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학살당하거나 탄압당하고 있다면서 서방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동시에 서방인들의 북한 여행은 결국 달러를 유입시켜 북한 정권만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함.

다. 중·북 관계

- 권영세 "올해 북중 고위급 교류 대폭 감소 (10/14, 연합뉴스)
 - 권영세 주중대사는 14일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과 관련, "중국은 북중관계가 국가 대 국가 간의 정상적 관계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하는 것으로 관찰하고 있다"고 밝힘.
 - 권 대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업무보고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 대화협상을 통한 북핵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특히 그는 지난해 제3차 핵실험 이후 최룡해 전 총정치국장의 방중,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의 방북 등으로 소강상태에 있던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올해 북중 간 고위급 교류의 대폭적인 감소는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말함.
 - 아울러 권 대사는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중국의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볼 수 있는 시험지가 '이중용도' 물품 규제라며 "이 부분을 중국이 적극적으로 금수조치를 하고 있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힘.

- 중국언론, '김정은 재등장' 속보로 보도 (10/14, 연합뉴스)
 - 중국언론들은 14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40일 만에 공개석상에 재등장했다는 보도를 긴급속보 형식으로 전하며 큰 관심을 나타냄.
 -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5시54분(현지시간)께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한 평양발 기사에서 김 제1위원장이 평양에 완공된 과학자 주택단지인 위성과학자주택 지구를 현지지도했다고 긴급보도함.
 - 또한 중국의 주요 통신사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오전 7시46분께 "김 제1위원장이 40여 일 만에 재등장해 시찰활동을 하며 (쿠데타설 등) 외부세계의 각종 추측을 불식했다"며 보도함.

- 중국 류젠차오 "북한, 새로운 민생개선 조치 취하고 있다" (10/15, 연합뉴스)
 - 한반도 실무를 담당하는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15일 북한이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위해 새로운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말함.
 - 류 부장조리는 이날 텐진(天津)시 빈하이(濱海)신구에서 열린 '동북아의 평화·발전 빈하이 콘퍼런스'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대화·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핫이슈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관련 국가들이)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고 건설적인 작용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평화·안정의 대국을 함께 수호해나가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함.
 - 이어 류 부장조리는 "중국은 전면적 심화개혁 등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한국은 '국민행복시대'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면서 "북한도 경제발전과 민생개선 부분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함.

- "북·중 국경 밀무역 여전...북한 '정상' 신호" <환구시보> (10/15,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40일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북한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중 국경 밀무역이 여전해 북한 내부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언론이 15일 보도함.
 -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랴오닝성 단둥(丹東)을 비롯한 북·중 접경지역에서 성행하는 밀무역이 김 제1위원장의 신변 이상을 둘러싼 다양한 추측이 제기된 최근에도 중단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함.

- 북·중 밀무역 상황에 정통한 한 인사는 "북한 정세가 정말로 긴장됐다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국경수비대이고 밀무역은 곧바로 중단된다"면서 "하지만 요즘은 밀무역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
- 북한, 중국 매체 통해 서방의 '인권 지적' 반박 (10/16, 연합뉴스)
 -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이 자사에 '북한 인권보고' 중문판 전문을 보내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소개했다고 16일 전함.
 - 북한은 이 보고서에서 "반북(反北) 적대세력이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고 있으나 여러 오류들이 있다"며 "진상은 결국 밝혀질 것이며 어떤 것으로도 (진상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함.
 -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적극적인 방어 전략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됨.
- 제3회 북·중 종합박람회 단둥서 개막 (10/16, 연합뉴스)
 - 중국 내 최대 대북교역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2014년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가 16일 막을 올림.
 -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양국의 각종 상품 전시를 중심으로 경제·무역·관광협력 상담과 문화·예술교류 등 다방면에 걸친 종합박람회 성격으로 진행될 예정임.
 - 랴오닝성 대외우호협회, 단둥시 정부와 박람회를 공동 주최하는 중국국제무역 촉진위원회(CCPIT) 단둥시위원회는 올해 박람회에 북한 측에서 100개 무역업체 관계자 300여 명을 비롯해 문화예술 공연단 90여 명과 여행사 관계자,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고 밝힘.
- 북한, 평안북도 동림군 중국인 관광객에 개방 (10/16, 연합뉴스)
 - 북·중은 16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시에서 북한 신의주시·동림군 이틀 관광코스 개통 기념식을 개최하였고, 이날 행사에는 북한 측에서 홍길남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중국 측에서 판쑹(潘爽) 단둥시 부시장이 대표로 참석함.
 - 동림군은 북·중 접경인 신의주시에서 동남쪽으로 40km가량 떨어져 있으며 중국

민간자본이 투자해 4성급 호텔과 공연장 등 관광객 접대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당일 또는 이틀 관광코스로 정식 개방된 북한의 접경도시는 평안북도 신의주시(~랴오닝성 단둥<丹東>), 함경북도 온성군(~지린성 투먼<圖們>), 회령시, 나선특별시(~지린성 훈춘<琿春>), 자강도 만포시(~지린성 지안<集安>시)로 늘어나게 되었음.

■ 북한측 인사들, 중국 주최 국제회의 돌연 불참 (10/16, 연합뉴스)

- 북한의 외교·안보, 경제 전문가들이 예정된 국제회의에 전원 불참하면서 이 행사를 주최한 중국 측이 당혹해하는 상황이 빚어짐.
- 15~16일 중국 톈진(天津)시 빈하이(濱海)신구에서는 동북아시아 6개국 전·현직 관료, 정치인들과 외교·안보 및 경제 전문가 등 400명 안팎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의 평화·발전 빈하이 콘퍼런스'가 열림.
- 주최 측은 이 행사에 한국과 북한을 비롯해 미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7개국 인사들을 초청하였고, 최근 자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포함한 7개국 정계요인, 학자, 도시시장, 기업대표 등이 모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콘퍼런스가 열린 이틀간 행사장에는 북한 측 대표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음.

■ 중시진핑, 김정은에 '짧은' 답전...친선관계 언급 없어 (10/17,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신중국 건립 기념일(10월 1일)을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보낸 축전에 달랑 두 문장짜리 짧은 답전을 보냈다.
- 시 주석은 '답전'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65돌에 즈음해 당신들이 축전을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융성번영과 조선인민의 행복을 축원한다"고 밝힘.
- 시 주석의 올해 답전에는 '전통적인 중조(중북)친선' 등의 표현이 없어 최근 악화된 양측관계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김 제1위원장이 신중국 건립 64주년을 맞아 전달한 축전에 답전을 보내면서 "전통적인 중조 친선·협조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하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하였음.

라. 일·북 관계

- "북, 일 당국자 방북 수시 허용 시사" (10/14, 연합뉴스)
 -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가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와 관련해 언제든지 일본 당국자의 방북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가 13일 밝힘.
 - 교도통신에 따르면 와다 명예교수는 송 대사가 납치 문제 재조사 진행 상황 확인과 관련해 일본 당국자를 "수시로 받아들여 이야기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방북한 일본인 연구자들에게 표명했다고 전함.
 - 한편, 송 대사는 지난달 29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린 북일 당국자 협의 때 일본 정부 측이 북한을 방문해 재조사 상황에 관해 특별조사위원회 측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것을 제안함.

- 일본 초당파 의원들, 당국자 북한 파견계획에 재고 요청 (10/17, 연합뉴스)
 -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귀환을 추진하는 초당파의원 모임은 16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납치문제 재조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평양에 당국자를 파견하려는 계획을 재고하라고 요청함.
 -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지난달 중순 조사가 여전히 초기단계에 있다며 조사결과를 전달하지 않고 있고, 일본 관계자가 평양을 방문해 북한 측이 이제껏 조사한 내용 전부를 직접 청취하라고 제의했음.
 - 초당파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하려는데 반대했으며 히라누마 의원은 "일본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일본, 이달 하순 북한에 정부 대표단 파견 (10/19,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 현황을 보고받으려고 이달 하순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9일 보도함.
 - 대표단 단장은 이하라 준이치(伊原 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며, 경찰청 관계자 등이 대표단에 포함될 전망이다.
 - 이와 관련, 일본 내 납치피해자 가족회 등은 대표단 방북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으면 북한이 1년에 걸쳐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납북자 조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판단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

마. 러·북 관계

- "북한, 러 극동 아무르주서 대규모 영농사업 추진" (10/16, 연합뉴스)
 - 북한이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의 농지를 대규모로 임대해 곡물과 채소를 재배할 계획이라고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밝힘.
 -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막심 세레이킨 극동개발부 차관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아무르주의 농지 1만~1만5천 헥타르(ha) 정도를 임대해 농사를 짓는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소개함.
 - 이 문제는 현재 양국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며 북한 측은 자금 조달과 농지 이용 방안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러시아 측에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세레이킨 차관은 덧붙임.

바. 기타

- 북한, 유엔서 자체 '인권결의안' 초안 회람시켜 (10/16, 연합뉴스)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1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각국 대표 6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고, 유엔 회원국 대표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음.
 - 북한은 "인권 문제가 정치화되면 안 되고, 인권 문제에서는 이중기준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로 주장하며 특히, 유엔에서의 인권 결의가 서방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추진되는데 반대한다고 밝힘.
 - AP통신은 이 외에도 '특정한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과 '유엔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편견 없이 재평가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전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북 남침시 핵무기 사용 불사' 패네타 회고록 논란 (10/15, 연합뉴스)
 - '한반도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해 필요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공언한 리언 패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고 시사잡지 '뉴스위크'가 14일(현지시간) 보도함.
 - 익명을 요구한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전직 고위관리는 "전형적으로 우둔한 미국관리의 발언"이라며 "한국인들이 이런 뉴스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핵군축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비확산 센터 소장은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며 "미국은 단순히 한국인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은 핵무기를 쓰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함.

- 한미, 23일께 '2+2'회의 개최...전략권 합의발표 전망 (10/17,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이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연례안보협의 회 (SCM)와 연계해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개최하기로 함.
 - 양국이 2+2 회의를 여는 것은 2010년 7월(서울)과 2012년 6월(워싱턴)에 이어 세 번째로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16일(현지시간) "지난 4월25일 한미 정상회담에 따라 2+2 회의 개최일정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왔고 그 결과 다음 주 SCM과 연계해 2+2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함.
 - 양국은 이번 2+2 회의에서 당초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방안을 합의 발표하고 강력한 대북 억지와 연합방위능력 강화를 위한 양국의 공동노력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짐.

나. 한·중 관계

- "한중일, 21일 사이버분야 당국자 협의" <닛케이> (10/16,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 일본 정부는 21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발 해킹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 사이버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실무급 대화를 개최한다고 니혼게이지(닛케이)이 16일 보도함.
 - 각국 민간 기술자단체 사이에서는 사이버 분야 협력이 이뤄져 왔지만 한중일 정부에 소속된 실무자들 간의 3자 협력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임.
 - 한편, 2008년 12월에 열린 제1차 한중일 3자 정상회담에서 세 나라는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한일·중일 관계가 악화함에 따라 그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음.

- 정부, '유라시아 네트워크 심포지엄' 내년 개최 제안 (10/16, 연합뉴스)
 - 정부는 16일(현지시간, 한국시간 16일 오후 9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관련,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 네트워크 심포지엄을 내년 상반기에 개최할 것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제안했다고 밝힘.
 - 유라시아 네트워크 심포지엄은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ACP) 등 국제기구, 러시아와 중국 등의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해 유라시아 연계 협력증진 방안과 우선 추진과제를 논의하자는 것임.
 - 청와대는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경통관, 교통 및 인프라 개선, 국가간 이해관계 조정 등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논의하는 한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동북아 운송시장 통합 논의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시진핑 중국 주석, '친박' 구상찬 '깜짝 독대' (10/17, 연합뉴스)
 - 중국 상하이(上海) 주재 한국총영사관 구상찬 총영사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면담과정에서 '깜짝 독대'를 한 것으로 확인됨.
 - 중국 공산당의 초청을 받아 '정당정책대화'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김 대표가 지난 14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을 면담하고 나온 뒤에 시 주석이 구 총영사와 5분가량 대화를 나눴다고 한국 방중단 관계자가 17일 전함.
 - 시 주석은 면담을 마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구 총영사를 따로 부른 다음

선 채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을 소개하고 이번 새누리당과 중국 공산당간 대화행사를 위해 노력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짐.

- 한·중 제5차 대테러협의회 21일 부산서 개최 (10/19, 연합뉴스)
 - 외교부는 19일 제5차 한·중 대테러 협의회가 21일 부산에서 열린다고 밝힘.
 -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대두한 외국인 테러 전투원(FTF) 문제와 최근 아시아·중동 지역 테러 정세 등을 평가할 예정임.
 - 한중 양국은 지난 2010년부터 대테러 협의회를 연례 개최하고 있으며 4차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중국 칭다오에서 열렸음.

다. 한·일 관계

- 일본, 아사히 보도취소에 '위안부문제 홍보강화' 결정 (10/14, 연합뉴스)
 - 아사히(朝日)신문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과거 보도를 취소한 것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자국의 입장을 세계 각국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함.
 -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각료회의)에서 아사히신문의 보도 취소와 관련 "국제 사회에서 객관적 사실에 기반을 둔 정확한 역사인식을 형성해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대처가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지금까지 이상으로 대외 발신을 강화해 가겠다"는 답변서를 결정함.
 - 각의 결정된 답변은 '2차 대전 때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강제로 끌고 왔다'는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사망) 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 아사히신문의 보도 때문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세계에 유포돼 일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하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려는 보수·우익 세력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임.
- 일본정부 "산케이 기자 출금연장 인도적으로 큰 문제" (10/15,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産經) 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키로

한 한국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인도(人道)상의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

-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5일 기자회견에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 조치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부연함.
- 일본신문협회는 이날 신문주간을 맞아 니가타(新潟)시에서 열린 제67회 신문 대회에서 가토 지국장을 기소한 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사람들의 알 권리에 응하기 위한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특별 결의를 채택함.

■ "일본자민당, 군위안부 특위 이달 중 설치" <닛케이> (10/15, 연합뉴스)

- 일본 집권 자민당이 군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특명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니혼 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5일 보도함.
- 자민당은 이달 안에 '일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명위원회'를 설치, 군위안부 문제 관련 정보를 해외에 발신하는 방안 등을 제언하는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닛케이는 소개함.
- 이와 관련,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전 외무상이 위원장을,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부총재가 고문을 각각 맡고, 특명위원회 활동은 군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아베 내각의 입장을 나라 안팎에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 아베 "ASEM 때 차대통령과 얘기할 기회 있으면 좋겠다" (10/15,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때 박근혜 대통령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함.
- 또한 아베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 등과도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표명하며 "에볼라나 중동 정세 안정화라는 국제적 과제에 대해 적극적 평화주의하에서 일본이 더욱 공헌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고 외교 구상을 밝힘.
-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ASEM에서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관해 홍보할 계획이며, 헤르만 반 롬퓌이 EU(유럽연합) 상임의장,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라고 전함.

- **日관방장관 "오해 피하려 외무성 홈페이지 위안부 문서 삭제" (10/15, 연합뉴스)**
 -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글을 삭제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오해를 피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함.
 - 스가 장관은 15일 정례기자회견에서 해당 문서의 삭제와 관련해 "열람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필요한 정리를 한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하며, 해당 페이지에 아시아여성기금의 디지털 기념관(홈페이지)의 링크가 있기 때문에 이를 클릭해서 따라가면 삭제한 문서를 여전히 볼 수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서를 삭제했다는 스가 장관의 15일 발언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를 수정하지 않고 이어 가겠다는 그간 일본 정부의 공언과는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정부, 日외무상 '독도 영유권 주장' 발언에 "개탄" (10/15, 연합뉴스)**
 -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자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개탄하면서 일본의 어떠한 영토주권 훼손 시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힘.
 - 정부는 15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그간의 공언과는 정반대로, 외무대신의 국회 발언을 통해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재차 제기해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함.
 - 앞서 기시다 외무상은 14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해 일본 외교의 주요 과제를 설명하면서 "우리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주장을 확실히 전해 끈질기게 대응하겠다"고 말함.

- **아사히 오보인정 빌미 강제연행 부정 전방위 공세 (10/16,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1996년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권고한 유엔 보고서(일명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만든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 유엔 특별보고관을 만나 일부 철회를 요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함.

- 이에 쿠마라스와미 씨는 "요시다 증언은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 한편, 스리랑카 법률가 출신인 쿠마라스와미 전 보고관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성노예제'로 규정하고 일본에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아 199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유엔이 직접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본격 조사해 발표한 첫 사례로 볼 수 있음.

■ "일본 의원들, 24일 박대통령 예방 추진" <마이니치> (10/16, 연합뉴스)

- 마이니치신문은 16일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회장(자민당 소속 중의원)을 포함한 일한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일·일한의런 합동총회(25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기회에 박 대통령과 면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함.
- 면담이 이뤄지면 누카가 회장 등은 11월10~11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 국제회의를 계기로 삼아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임.
- 또 일본 재계단체인 게이단련(經團連)은 한국 전경련과의 정기 간담회 개최를 위해 다음달 하순 사카키바라 사다유키(신<木+神>原定征)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며, 이때 박 대통령과 면담하는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함.

■ 한일, 유엔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설전' (10/16,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 정부가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 위원회 여성 의제 토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임.
- 한총회 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지속 되는 분쟁하 성폭력의 핵심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감안할 때, 시급하고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인간 존엄성의 문제를 지체없이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일본 정부에 촉구함.
- 이에 대해 나오토 히사지마 주유엔 일본대표부 공사는 답변권을 행사, "일본은 여성 권리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으며, 위안부 출신 (여성들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원론적 입장을 취했으며,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에 마음 아파한다는 점은 역대 정권과 입장이 같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언을 언급함.

- 정부 "아베 야스쿠니 공물봉납·일부 의원 참배 개탄" (10/17, 연합뉴스)
 -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靖國) 신사의 가을 제사에 공물을 보낸 데 대해 17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함.
 -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금일 아베 총리가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과거 일본의 침략 전쟁과 한반도 식민지 침탈을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금년 들어 춘계 예대제 및 8.15에 이어 또 다시 공물을 봉납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참배를 강행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함.
 -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靖國) 신사 가을 제사(17~20일) 시작일인 17일 야스쿠니 신사에 '마사카키' (眞神<木+神>)로 불리는 공물을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의 명의로 봉납했고, 초당파 의원연맹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 국회의원 110여 명도 이날 야스쿠니를 집단 참배하였음.
- 아베 내각 각료 3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10/18, 연합뉴스)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각료 3명이 18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함.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 아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납치문제 담당상 (납치상), 아리무라 하루코(有村治子) 여성활약담당상 등 3명은 야스쿠니 신사 가을제사(춘계 예대제, 17~20일)를 맞아 이날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의 야스쿠니 신사를 각각 참배함.
 - 지난달 3일, 아베 총리가 취임 후 첫 번째 개각을 단행한 이후 일본 현직 각료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날 참배한 각료 3명은 개각 때 내각에 새롭게 진입했으며, 모두 여성임.

- 야스쿠니신사 "영혼 못나눠"...전범 분사 거부 확인 (10/18, 연합뉴스)
 -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돼 '전범(戰犯) 신사'라는 비관을 받는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의 히구치 도모아키(桶口知明) 홍보담당 과장은 지난 18일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일부 한국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전범 분사 문제와 관련, "신도에 분사라는 개념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신도에서 분사는 여기에 있는 신을 다른 데도 똑같이 모시는 것만 있다"면서 "강물에 물을 한 컵 넣었다고 할 때 나중에 그 물을 그대로 뜰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함.
 - 또 일본 각료들의 신사 참배와 관련, "신사에서는 각료든 누구든 똑같으며 각료라고 해서 배려하는 것은 없다"면서 "신사에서 유일하게 배려하는 것은 천황(일왕)과 황족으로 이들 차량만 신사 앞까지 올 수 있다"고 밝힘.

라. 미·중 관계

- 미국·영국, 중국과 홍콩 사태 놓고 설전 (10/16, 연합뉴스)
 - 미국, 영국 등 서방과 중국이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홍콩의 반중(反中) 민주화 시위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는 등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음.
 - 미국 국무부의 쟈 사키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홍콩 경찰의 시위자 집단 구타 사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홍콩 당국이 해당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며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함.
 - 이에 대해,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국무부의 입장과 관련, "그 어떤 외국 정부도 홍콩 사무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며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고 요구함.
- 케리-양제츠, 미중 정상회담 조율·북핵 등 논의 (10/19,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 위원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이틀째 회동을 하고 양국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조율함.
 - 이번 회동은 다음 달 베이징(北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개최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양자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이번 회동에서 양국 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홍콩 민주화 시위와 남중국해·동중국해 영유권 갈등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마. 미·일 관계

■ 미일 정상, TPP협상 타개·에볼라 공조 확인 (10/15,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5일 전화 회담을 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개와 에볼라 대책 공조를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이날 오전 이루어진 전화 회담에는 일본 측에서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국가안전보장국장,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사무차관이 배석함.
- 한편, 아베 총리는 16일부터 이틀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번 ASEM 회의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8개월 만에 비공식 회담을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밝혀짐.

■ "오바마, '한일관계 개선' 아베에 촉구" <아사히> (10/16,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5일(한국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가진 전화회담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6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미국의 동북아시아 동맹국끼리 의사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했다"고 설명함.
- 한편, 미일 정상은 15일 오전 미국 측의 요청으로 약 25분간 전화로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 협상과 에볼라 대응책 등을 협의함.

바. 중·일 관계

- "일본 외무성 간부, 지난달 몰래 방중" <교도> (10/15, 연합뉴스)
 - 일본 외무성의 '중국통' 간부인 다루미 히데오(垂秀夫) 관방총무과장이 지난달 중순 비밀리에 베이징(北京)을 방문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함.
 - 교도통신의 취재에 응한 중일관계 소식통은 "다루미 과장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특명을 받아 중국과 극비리에 (정상회담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을 것"이라고 말함.
 - 교도는 다루미 과장이 아베 총리의 외교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국가안보국장과 가까운 인물이라며, 11월 10~11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삼아 중일 정상회담을 개최 하는 문제에 대해 중국 측과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중국, 日각료 야스쿠니 참배 계획에 반발 (10/15,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일본 각료가 최근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침략 역사의 반성'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함.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일본이 과거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깊이 반성하고 군국주의와의 경계를 철저히 분명하게 그을 때만이 비로소 중일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된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음.
 - 한편, 일본 정치권 인사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실제로 참배한다면 다음 달 10~11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중일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시간 들여 센카쿠 대화하자"…중국에 응수 타진 (10/16,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중일 영유권 갈등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문제에 대해 '시간을 들여 중국과 대화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타진중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16일 보도함.
 - 센카쿠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내달 10~11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삼아 중일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해 이 같은 입장을 중국 측에 제시하고 조정에

착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센카쿠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다만 중국이 독자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알고 있다 시간을 들여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향한다 등의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이 일본 측 안(案)이라고 마이니치는 소개함.

■ 중일 '센카쿠-정상회담' 퍼즐 맞추기 성공할까 (10/16, 연합뉴스)

- 16일자 마이니치 신문은 다음 달 10~11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삼아 중일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 측이 센카쿠 문제와 관련한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함.
- 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센카쿠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다만 중국이 독자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알고 있다 시간을 들여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향한다 등의 입장을 표명하는 안을 일본 측이 중국 쪽에 전달했다고 마이니치는 소개함.
- 이는 '정상회담을 하려면 센카쿠 영유권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되 문제의 해결은 뒤로 미루는 이른바 다나아게(사안의 해결을 훗날로 미룬다는 뜻의 일본어) 방안을 수용하라'는 중국 측 요구에 대한 일본의 반응으로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보도 대로라면 중국이 '영토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센카쿠를 실효지배 중인 일본은 '분쟁은 존재하지 않지만, 의견차이는 존재한다'는 수준에서 타협을 모색하고 있는 셈임.

■ 아베 야스쿠니 공물봉납은 중국-지지층 사이 절충책 (10/17,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7일 시작한 야스쿠니(靖國) 신사 가을제사(추계 예대제, 17~20일)를 맞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의 일종인 '마사카키' (眞心<木+神>)를 보낸 것은 정상회담을 타진중인 중국과, 자신을 지지하는 국내 보수층을 두루 의식한 '절충책'으로 풀이됨.
- 이탈리아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18일 귀국 예정이어서 제사기간인 20일 안에 참배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내달 10~11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 성사를 의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분석함.

- 결국 아베 총리가 참배는 보류하되, 공물을 보낸 것은 '외교 때문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야스쿠니에 있다'는 메시지를 보수 지지층에 전달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됨.
- 중국 "아베 야스쿠니 공물봉납 강력반대" (10/17,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靖國) 신사의 가을 제사에 공물을 보낸 데 대해 17일 강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강력히 반대함.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중국은 야스쿠니 신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동향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결연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밝힘.
 - 또한, 홍 대변인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16일(현지시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자 만찬 후에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눴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뒤 중일관계에 대한 중국 측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함.
- 일본 아베 총리, 맹자 인용해 중국에 견제구 (10/19, 연합뉴스)
 - 일본 총리가 중국 고대 사상가 맹자를 인용, 중국을 우회적으로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했음.
 - NHK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19일 도쿄 도내에서 열린 국제법조협회 연례 총회에서 행한 인사말을 통해 "2천300년 전 맹자는 '천하에 도(道)가 있을 때는 덕(德)있는 현명한 국가가 지도하고, 천하가 혼란해지면 힘있는 대국이 지배한다'고 말했다"며 "천하무도(天下無道)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언급함.
 - 이는 내달 10~11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 정상회담을 모색하는 상황을 감안한 듯 중국을 직접 거명하거나, '힘에 의한 현상변경' 등 그간 중국을 겨냥해서 해온 직설화법은 피했지만 다분히 중국의 '대국굴기'(大國崛起·대국으로 우뚝 선다는 뜻)를 견제하는 발언으로 비추어짐.

사. 중·러 관계

- 러시아-중국, 가스공급 정부 간 협정 체결 (10/13, 연합뉴스)
 - 러시아와 중국이 러시아 시베리아-극동 지역의 가스를 중국 동북 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한 '동부 노선' 가스 공급 사업에 관한 정부 간 협정에 서명함.
 -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협정서는 13일(현지시간) 러시아를 방문한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간 회담에서 작성되었으며, 협정에 따라 양국 정부는 러시아산 가스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수송 인프라의 설계, 건설, 운용 등 전 과정에서 전면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함.
 - 정부 간 협정은 앞서 지난 5월 러시아 국영가스기업 가스프롬과 중국석유천연가스 공사(CNPC) 간에 체결된 가스공급 계약의 이행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협정 기간은 40년이며 양측의 이의가 없는 한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됨.

- 리커창 러시아서도 '고속철 세일즈' 앞장 (10/14, 연합뉴스)
 - 중국의 고속철 '세일즈맨'을 자처해 온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가 13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간 회담 이후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러시아 모스크바와 카잔을 잇는 770km 구간에 고속철을 건설하는 1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중국 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14일 보도함.
 - 또한 신문은 이 철도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에 맞춰 건설되며, 열차 속도를 시속 400km로 끌어올려 현재 13시간이 걸리는 이동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함.
 - 한편, 유라시아 고속철도는 베이징에서 모스크바까지 약 7천km 구간을 아우르며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중국이 추진중인 '실크로드 경제지대' 구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중국, 러시아와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10/14, 연합뉴스)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과 1천500억 위안(약 26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고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가 14일 보도함.

- 인민은행은 13일 러시아와 서명식을 함으로써 2008년 이후 세계 20여개 국가(지역)와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었다고 설명함.
 - 중국은 또한 올해 들어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룩셈부르크 등에 이어 지난 7월 서울에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을 지정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열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이 위안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높이려고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도 가속될 전망이다.
- 중국 '동해 출구' 북한서 극동 러시아로 중심 이동 (10/15, 연합뉴스)
 - '항구를 빌려 동해로 나가는 전략'을 추진 중인 중국이 시선을 북한에서 극동 러시아로 빠르게 옮기고 있음.
 - 그간 중국은 두만강 하구가 북·러의 공유수면인 탓에 동해와 직접 연결된 뱃길이 없어 동북지역의 물류비 부담이 커지자 북한의 동해항만들을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타진해왔으나 지난해 초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북·중 관계에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한 북·중 경협사업들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중국의 북한 항만 개발도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임.
 - 대신 중국은 자국 국경에서 북한 항만과 비슷한 거리에 있으면서도 기존 항만 인프라 및 항로 개설이 양호한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 러시아 최대 항만운영기업인 슈마그룹과 30억 달러(약 3조 2천억원)를 투자해 오는 2018년까지 러시아 연해주 자루비노항을 아시아 최대 규모 다목적 항만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함.
 - 푸틴 "2015년까지 러·중 교역 1천억 달러로 늘릴 것" (10/15, 연합뉴스)
 - 2015년까지 러시아와 중국 간 교역량을 1천억 달러로 늘리기로 한 양국 간 합의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밝힘.
 -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를 맞아 면담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 내년도까지 양국 간 교역을 1천억 달러로 늘리기로 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푸틴 대통령은 세계 경기의 후퇴에도, 지난해 양국 간 교역 증가율은 1.6%, 올 상반기 증가율도 4.5%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전망함.

아. 일·러 관계

- "러시아, 일본에 가스관 건설 제안" <닛케이> (10/15, 연합뉴스)
 - 러시아 정부가 사할린과 홋카이도(北海道)를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이 15일 보도함.
 - 러시아 정부는 지난 9월 이 같은 방안을 일본 측에 제안했으며, 내달 10~11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진행하는 쪽으로 추진 중인 러일 정상회담 때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함.
 - 러시아의 가스관 건설 제안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주요 7개국(G7)의 포위망을 교란하고, 경제면에서 갈수록 커지는 대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됨.

- 아베-푸틴 10분간 회담... 'APEC 때 정식회담' 재확인 (10/17,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회담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차 밀라노를 방문한 두 정상은 약 10분간 대화를 나눴으며 다음 달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이용해 정식 회담을 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함.
 -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관방부 부(副)장관은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의 면담에 관해 "비공식 회담이 아니다. 정상 간의 제대로 된 회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며, 교도통신은 두 정상이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고 아베 총리가 "일본은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한다. 군사적 공헌이 아닌 형태로 가능한 한 지원하겠다"며 러시아의 양해를 구했다고 전함.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北, 유엔 비난공세…인권결의안 처리반대 사전압박(10/13, 뉴시스)
 - 북한 노동신문은 13일 개인 필명의 기사에서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처리 움직임에 경계심을 드러내며 유엔을 향한 비난 공세를 일찌감치 시작했다.
 - 노동신문은 "유엔은 군주제가 아니며 안전보장이사회는 원로원이 아니다"라며 "만일 유엔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개혁되지 않고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책임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세계는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주의적인 기구인 유엔에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음.

- "북, 아시아서 기아율 최고"(10/13,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워싱턴의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11일 유엔이 정한 '세계식량의 날'(10월16일)을 맞아 발표한 '2014 세계 굶주림지수(2014 Global Hunger Index)' 보고서에서 북한의 굶주림 상태를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했음.
 - 북한이 아시아에서 굶주리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이유는 경제 정책의 실패와 식량 분배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지적함.
 - 이 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굶주림 지수는 전체 인구 중 영양실조인 사람의 비율, 5살 미만 유아의 저체중률과 사망률 등 3가지 항목으로 산출되며, 굶주림 지수가 30 보다 높으면 식량 상황이 매우 위험한 수준이고, 20 이상 30미만은 위험한 수준, 10이상 20미만은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됨.
 - 북한의 올해 굶주림 지수는 16.4로 지난해의 19.3보다는 개선됐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만성적 식량 부족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농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하며 식량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는 북한의 굶주림 지수가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개선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함.

- WFP "북 봄가뭄 작황에 부정적 영향"(10/15,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WFP)은 15일 공개한 '세계 식량 안보 최신 정보'(Global Food Security Update)에서 올해 초 북한의 곡창지역에 내린 비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가을 작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음.
 - 이 보고서는 세계식량계획의 식량 지원과 관련한 수요를 분석하는 전문 부서인 '취약성 분석 및 지도제작'(VAM)국이 작성했으며, 북한을 비롯해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등 아시아의 3개국을 가뭄의 피해로 농산물 생산이 줄어들 수 있는 지역으로 꼽았음.
 - 북한 당국은 봄 작황이 가뭄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약 3만 톤 감소했다고 유엔에 보고했으며, 북한의 관영매체는 가뭄의 심각성을 보도하기도 했음.

- 북한, 중국 매체 통해 서방의 '인권 지적' 반박(10/16, 연합뉴스)
 -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이 자사에 '북한인권보고' 증문판 전문을 보내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소개하고, 서방의 '인권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했음.
 - 북한은 보고서에서 "반북 적대세력이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고 있으나 여러 오류들이 있다"며 "진상은 결국 밝혀질 것이며 어떤 것으로도 (진상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은 "미국은 정치적 목조르기, 군사적 압박, 경제적 고립, 핵 소동 선동 등 음모를 벌이고 있다"며 "그의 추종세력들도 국제사회에서 반북 인권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 FAO "북 농업생산성, 남한의 17%"(10/16, 자유아시아방송)
 - 식량농업기구(FAO)는 16일 공개한 2014년 세계식량농업백서(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는 최근 10년간 북한 농민 한 명이 일 년 동안 생산한 곡물을 달러로 환산하면 1,131달러로, 북한의 일인당 농업생산성이 남한의 17% 수준이라고 평가했음.
 - 2000년대 중반 대북 식량지원의 실무를 맡았던 앤드루 나치오스 미국 국제개발처 전 차장은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높이려면 협동농장 대신 주민들의 개인 영농과 장마당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남북한의 농업생산성은 5배가량 남한이 높지만, 농사짓는 땅은 북한이 더

넓은데, 세계식량농업백서는 2011년 현재 북한의 농지 면적은 약 255만5천 헥타르이며 남한의 농지 면적은 약 175만6천 헥타르로 북한 농지의 약 3분의 2수준이라고 소개했음.

- 한편, 식량농업백서는 2013년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북한 주민의 수를 23년 전인 1990년보다 약 60만 명 줄어든 300만여 명으로 추산했는데, 전체 인구 대비 농민 수 비율은 지난 23년간 약 15% 감소함.

■ 북한, 유엔서 자체 '인권결의안' 초안 회람시켜(10/16, 연합뉴스)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15일(현지시간)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고, 뉴욕 유엔본부에서 각국 대표 6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비공개 설명회를 열어 유엔 회원국 대표들을 상대로 약 15분간 설명회를 진행했음.
- 북한은 초안에서 자국이 국제 사회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매매·매춘 등의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유엔 아동권리협약 보충의정서'에 서명한 점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음.
- 또 초안에서 "인권 문제가 정치화되면 안 되고, 인권 문제에서는 이중기준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요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음.
- 특히, 북한은 유엔에서의 인권 결의가 서방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추진되는데 반대하며, 인권 문제는 건설적이고 비 대결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공정하게 다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국의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AP통신은 이 외에도 '특정한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과 '유엔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편견 없이 재평가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 이날 설명회는 북한이 결의안 초안에 대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절차로 보이며, 북한은 결의안이 확정되면 유엔 제3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임.
- AP통신에 따르면 설명회에서 중국 측은 "한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고, 상호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의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 러주재 북한 대사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시도는 불법"(10/17, 연합뉴스)
 -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서방의 시도는 불법이라고 러시아 주재 김형준 북한 대사가 16일(현지시간) 주장했다.
 - 김 대사는 이날 현지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서방국들은 자신들의 음흉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인권 운동은 위성국들을 동원해 유엔 총회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 그는 "이러한 서방의 시도는 합법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많은 논쟁의 여지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결의안 채택 시도는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고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전형적 예"라고 비난했다.
 - 또한 오랫동안 핵 문제를 과장해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시도를 해오던 서방이 이제는 같은 목적으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왔다며 전 세계는 인권을 정치적 압력 행사와 내정 간섭 도구로 활용하려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정책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北 "인권 빌미 내정간섭에 강경 대처할 것"(10/18, 연합뉴스)
 - 북한인권문제 연구기관인 조선인권연구협회는 17일 대변인 담화에서 유엔에 배포한 자체 인권보고서가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인권을 빌미로 한 적대세력의 내정간섭에 강경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협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공화국의 영상(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제도 전복을 실현해보려는 흉악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내정간섭을 시도하는 적대세력에 강경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 또 담화는 COI 보고서가 탈북자들의 억측과 악감정을 섞어 만들어졌다고 비난하고 "진정한 인권 보호 증진을 바라는 나라들이라면 이에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北, 朴대통령 아셈 발언 실명 비난... "정치적 도발"(10/18, 연합뉴스)
 - 북한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망치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또 하나의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도발이며 모처럼 마련된 북남 대화의 분위기를 망치게 하는 엄중한 망발"이라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또 "남조선을 세계 최악의 인권 불모지, 민생 폐허지대로 전락시켜놓고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각종 참극을 빚어놓아 만사람의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박근혜는 입이 열 개라도 그 누구에 대해 인권이니, 주민의 고통이니 할 체면이 없다"고 비난함.

2. 북한 인권

- 탈북단체, 北수용소 수감자 40명 명단 공개(10/14, 데일리NK)
 - (사)엔케이워치는 14일 '북한 정치범수용소 강제구금피해자 UN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탈북자 20명을 심층 인터뷰해 파악한 '2014년 정치범수용소 강제구금 피해자' 보고서를 발표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가족 혹은 지인들 중 3명이 함경남도 요덕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어느 수용소에 끌려갔는지 확인할 수 없는 인원은 37명으로 파악됐음.
 - 수감 이유는 한국기도행이 8명, 체제불만 7명, 연좌제 1명, 기독교접촉 1명, 한국 라디오 청취 1명, 기타 누명으로 인한 인원이 2명으로 나타남.
 - 남성과 여성은 각각 20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0대 이하와 20~30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50대가 8명인 것으로 조사됐음.
 - 보고서는 낮은 연령대가 많은 이유에 대해 젊은층 사이에서 체제에 대한 불만을 품고 탈북을 기도하는 인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음.
 - 엔케이워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40명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명단을 'UN강제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 제출하겠다고 밝힘.

- “북한인권법 제정해야” 시민단체, 국회 앞 정기집회(10/14, 연합뉴스)
 - 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매주 화요일 무기한 정기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힘.
 - 이들은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인권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국제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 또한 "정기 집회와 함께 의원들과의 면담을 병행해 국회를 압박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음.

-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북한인권 없이 통일 없다”(10/15, 연합뉴스)
 -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15일 독일 베를린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민주평통 주최 한독평화통일포럼 기조발제에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북한인권 감시와 인권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현 수석부의장은 동독 인권 개선을 위한 서독의 노력이 25년 전 독일 통일을 뒷받침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북한 정권의 권력 세습과 인권 탄압을 비판했음.
 - 또한 그간 대한민국 정부가 분단 관리에 집중하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시각과 접근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지적했음.

- “北 인권 결의안, 안보리 통과 쉽지 않아”(10/15, YTN)
 - 오준 유엔주재 한국 대사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유엔대표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인권 탄압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안보리 결정이 있어야 이행이 가능하며, 국제형사법정에 회부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다고 밝혔음.
 - 따라서 안보리 차원에서 어떤 이행이 가능할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북한인권대화 과정에 노동교화소 실사 필요"(10/17, 연합뉴스)
 - 북한인권위원회(HRNIK)의 로버타 코언 공동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최근 인권 문제에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북한과의 인권 대화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북한 노동교화소의 현장실사 같은 단계가 있어야 인권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코언 위원장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가 지난 7일 연 인권 설명회에서 노동교화소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 "현장 실사로 이어져야 하며, 그 다음으로 약 12만 명이 비참하게 수용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논의로 연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북한과의 인권대화가 다른 인권 관련 대북조치들을 대가로 삼는 일종의 거래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대북 인권대화 창구로 일원화돼야 한다거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제안한 '인권 연락그룹'이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다자 협력체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체코 '북한인권유린 가해자 처벌해야'(10/17, 미국의 소리)
 - 체코 외무부는 16일 'VOA'에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포함한 형사사법 기구에 회부하는데 전적으로 찬성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음.
 - 특히 이런 절차를 거쳐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폐쇄와 정치범 석방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음.
 - 체코 외무부는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면서, 이미 이런 입장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확인했음.

- 미 탈북자 단체, 미 북한인권법에 사의(10/17,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에 직접 정착한 탈북자들의 단체 '미주자유북한인연합회'의 박철 대표는 17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미국 정치권에 사의를 표했음.
 - 또한 한국 정부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음.

- 이어 일각에서 호기심으로 북한 관광에 나서고 있으나 북한은 정치적 목적으로 미국인 3명을 억류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 지도부를 반인도 인권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데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줄 것도 촉구했음.
- 킹 특사 "북한은 '왕따국가'...여행하지 마라"(10/18,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인권 특사는 17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와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LK)가 KEI 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토론회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비판하면서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공개 촉구했음.
 - 그는 북한을 '왕따국가'(pariah state, outcast)라고 규정하면서 전반적인 북한인권 문제와 더불어 현재 북한에 억류된 3명의 미국인 문제를 거론했음.
 - 킹 특사는 유럽연합(EU) 등이 북한의 반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유엔 인권 결의안을 추진하는데 맞서 북한이 자체 결의안을 만들어 설명회에 나선 것에 대해 "이 결의안의 충격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기회를 활용해 북한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함을 강조했다.
- "통일 뒤 北 반인권범죄재판 국제법 시각서 준비해야"(10/19, 연합뉴스)
 -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상임재판관은 18일 사법정책연구원 등 주최로 열린 '공법과 형사법의 접점'의 기조강연에서 통일 뒤 북한의 반인권적 인 범죄를 처벌하고 재판하기 위해서는 국제법 시각에서 사안을 연구하는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음.
 - 그는 "(통일 뒤 상황을) 국내법적인 검토뿐 아니라 국제법적 시각에서도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3월 출간된 유엔인권위원회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그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 권 재판관은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에 광범위한 인권 탄압이 있고, 그 정도가 인권에 반한 죄에 해당할 만큼 심각하다고 발표했다"며 "따라서 개인적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할 당국자들이 있고, 유엔안보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성경 소지했다고 총살, 목회자 만났다고 수용소행...(10/19, 크리스천투데이)
 -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최근 '2014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발간했으며, 지난 2007년 이후 입국한 탈북민 9,742명의 종교자유에 대한 인식조사와, 'NKDB 통합인권 DB'가 보유한 50,858건의 사건과 28,649명의 인물 중 북한 종교자유 침해에 대한 사건 1,084건과 인물 802명에 대한 분석 내용을 포함함.
 -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설문에 9,174명 중 33명을 제외한 9,141명(99.6%)가 '아니다'로 응답한 했으며, '평양 아닌 지방에 당국이 인정하는 합법적 가정예배 처소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9,289명 중 9,179명(98.8%)이 '없다'고 답했고, '있다'는 응답자 1.2%도 직접 목격한 적은 없었음.
 - '종교활동 시 처벌 수준'에 대해 가장 낮은 '노동단련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8,726명 중 253명(2.9%), '교화소행'이 1,024명(11.7%), '정치범수용소행'이 절반을 넘는 4,801명(55.0%)이었음.

3. 탈북자

- 캐나다 올해 탈북난민 수용 "제로"(10/15, 자유아시아방송)
 -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이 집계한 최신 난민입국자통계(Claims Referred and Finalized: North Korea)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올 들어 400여 건의 탈북자 난민신청을 심사했으나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심사대상 433건 중 단 한 명의 탈북자도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민국에 알리지 않고 불출석하는 등 심사포기의 경우가 194건에 달했고, 당사자 등이 자발적으로 신청 철회를 통보한 경우도 70여 건임.
 - 지난해부터의 캐나다 정부의 탈북 난민 수용률의 급격한 감소에 대해, 2013년 봄부터 캐나다와 한국 정부 간에 지문 공유 제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측되었다는 것이 캐나다 탈북자와 한인들의 공통된 의견임.

- 대법, 북한 보위부 직파 여간첩 징역 3년 확정(10/15, 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9·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음.
 -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2년 6월 보위부 공작원이 된 이 씨는 탈북자 출신 반복 활동가 최모 씨의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고 그해 12월 중국과 태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왔음.
 - 이씨는 기억을 지우는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을 사용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실시한 심리 검사를 무사히 통과했으나 집중 신문 끝에 공작원 신분을 실토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음.
 - 1·2심에서 국선 변호인 조력을 받은 이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1심은 이씨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추궁에 못 이겨 자백했을 뿐 자수한 것은 아니라며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으며 2심 판단도 같았음.
 - 상고심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이 씨는 수사기관이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고 입장을 바꿔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국정원 합선센터에서의 자백도 거짓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인정되지 못했음.
 - 대법원은 "피고인의 자백 내용은 그 자체로 볼 때 합리성이 있고 정황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자백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음.
 - 상고심에서 이씨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기억을 지우는 약물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한다"며 "이런 허위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음.

- "노모 보고 싶다"...재입북 시도 탈북여성 집유(10/15, 연합뉴스)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15일 탈북 뒤 남한에서 생활하다가 재입북을 모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탈북자 P(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음.
 - P씨는 지난해 4월 북한을 함께 탈출해 동거해온 남성과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후 금융기관 대출을 받고 거주지의 집기를 처분하는 등

재입북 준비를 하다가 이 남성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중도 포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남성은 같은 해 7월 홀로 중국을 거쳐 재입북했음.

- P씨는 "홀로 계신 노모가 보고 싶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음.
- 송 판사는 "치밀하게 북한으로의 탈출을 준비한 점이 있지만 뒤늦게나마 재입북을 단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함.

■ 탈북자 6명, 라오스 북부에서 체포돼(10/17, 연합뉴스)

- 라오스에서 활동 중인 한 탈북지원단체는 탈북자 6명이 16일 낮(현지시각) 라오스 북부 루앙남타 지역의 한 검문소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혀 수감됐다고 밝혔음.
- 이들 탈북자는 당시 태국 국경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던 상태였으며 인솔자가 사라진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경찰에게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음.
- 탈북지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4명은 20~30대 여성, 나머지 2명은 40대 남성과 여성 각각 1명이라며 각자 개별적으로 북한을 탈출했다고 밝혔음.
- 그는 탈북자들이 현지 경찰에 체포된 직후 이들을 돕고 있던 한국인 1명이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으며, 우리 당국은 이들의 체포와 관련된 제보를 받은 직후 라오스 경찰과 접촉하고 탈북민 측과도 접촉해 체포 경위 및 이들의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음.
-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탈북자의 신변 안전을 고려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정부의 기존 방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정부 당국자는 "경찰과 접촉 시 이들의 안위를 확인했고, 최대한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함.

■ 라오스에서 체포된 탈북자 석방...태국 입국(10/18, 연합뉴스)

- 18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6일 라오스에서 체포된 탈북자 6명이 석방된 뒤 태국에 입국한 뒤 이민국의 탈북자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음.
- 이 관계자는 "태국 당국이 현지 법에 규정된 인도적 절차에 따라 이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 가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으며, 이들의 한국행은 3~4주 정도 걸릴 전망이다.

- 법원, 잠든 친딸 강제추행한 40대 탈북자 징역 5년(10/18, 연합뉴스)
 -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탈북자 출신 A(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음.
 - A씨는 지난해 6월 11일~12월 27일 사이 인천시 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든 친딸(14)을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지난 1월 2일 부인 B(44)씨와 딸을 흥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 재판부는 "자신의 딸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반인륜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음.
 - 또한 "피고인은 2차례 이상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돼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사유를 설명했다.

4. 이산가족

- 특이동향 없음

5. 납북자

- "일, 북한과 대화로 납치자 문제 해결"(10/13, 자유아시아방송)
 - NHK방송은 일본 아베 총리가 센다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고 보도했음.
 - 그러나 동시에 "'대화와 압력'이라는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 이어 아베 총리는 북한이 요청한 평양 방문은 여야 국회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담당자 파견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 덧붙였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방침과 달리, 납치자 가족들은 일본정부의 북한

방문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고 NHK방송은 전했다.

- 일본 외상 "북한 핵실험시 북-일 교섭 중단"(10/15, 미국의 소리)
 - 기시다 후미오 외상은 15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납치문제에 관한 일-북 정부 간 협의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북한에 수차례 전달했다"고 밝혔다.
- "일본, 북한 납치조사위원장과 회담 추진" <산케이> (10/15, 연합뉴스)
 -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 재조사 실패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 당국자와 북측 조사위원회 최고 책임자 간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 재조사의 실패 파악을 위해 평양에 당국자를 파견, 납치문제 등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인 서대하 북한 국방위원회 안전담당 참사 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을 면담하게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일각에서 당국자 방북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12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한다"며 당국자 파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음.
 - 산케이는 일본 정부의 당국자 북한 파견 여부를 이달 중 최종 결정할 생각이라고 소개했으며, 방북단은 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단장을 맡고, 외무성, 납치문제 대책본부, 경찰청 등의 담당 직원들이 포함될 전망이다라고 보도했다.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대북 비료지원 검토"... 7년만에 재개될 듯(10/14, 동아일보)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북 비료 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음.
 -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합농촌단지 사업을 언급하며 "마을 단위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비료 지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부역 개조, 마을 도로 정비 등 민생 인프라 차원의 구체적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어 박 대통령은 "기존의 의약품 지원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의료장비, 의료시설 등 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음.

- 정부 "北책임조치 있어야 5·24 해제, 입장변화 없어"(10/14,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음.
 - 이 당국자는 "다만 그 책임 있는 조치를 논의하려면 북한과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한다"며 "이 정부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조치'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을 써 본 적이 없고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음.
 -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북한 농촌복합단지 건설 구상과 관련해 비료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마을 단위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차원에서 비료 지원이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과거의 당국 간에 이뤄진 대규모 비료 지원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료나 식량 지원 등의 인도적 지원을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연계하는 방침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경기도 "북 결핵 치료지원 확대" 대북지원 재개 신호탄 관심(10/15, 경인일보)
 - 경기도는 북한 다제내성 결핵치료 지원을 수행 중인 유진벨재단을 통해 다음달 4일까지 북한 내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음.
 - 이번 지원은 도가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약과 환자영양식 구입비 5억 원을 지원하고, 도와 파트너십을 맺은 유진벨재단이 물품 구입과 반출을 맡게 되는

형식임.

- 이를 통해 북한 내 12개소 다제내성 결핵센터에서 치료활동이 진행될 전망이며, 올해는 다제내성 결핵의 심각성을 고려해 예산을 대폭 확대했음.

■ 김용익 "현정부 적십자사 인도적 대북지원 1억원 뿐"(10/16, 연합뉴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3년 2월 현 정부가 출범한 뒤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 지원 규모는 1억1천300만원으로, 대북지원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 대한적십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텐트·취사도구·위생키트 등 긴급구호품 구입비용 지원이 유일한 사례였고, 올해는 지원 실적이 전무함.
- 정부 지원액은 유진벨, 섬김, 국제사랑재단 등 민간단체들의 2013~2014년 대북 지원액(113억원)과 비교해 10분의 1수준에 불과함.
- 김 의원은 "참여정부에서는 6천806억원 상당의 대북지원이 이뤄졌고,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2.6% 수준인 176억원을 지원했다"며 "하지만 현 정부의 지원액은 이명박 정부보다도 현저히 적다"고 지적했다.

■ 한국NGO, 북에 개인용 온실 첫 지원(10/17, 자유아시아방송)

- 한국의 민간구호단체인 에이스경암은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에 대한 농업 지원 범위를 협동 농장에서 개인이 경작하는 텃밭 즉 폐기밭까지 확대해 인근 주민 50만 명에 혜택이 미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힘.
- 이 단체의 김상영 국장은 이달 초 북한에 전달한 영농물자에 개인 텃밭을 위한 온실 건설 장비를 처음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함.
- 텃밭용 온실 건설자재와 재배 작물의 씨앗 등을 보내 겨울에도 개인 텃밭에서 채소를 재배하도록 한 것임.

8. 북한동향

-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사건(백인 경찰의 총격으로 흑인 청년 사망)을 거론하며 "미국이 부르짖는 '만민평등'과 '인권옹호'란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기 위한 면사포에 지나지 않는다"며 '미국은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논하기 전에 제 코부터 씻는 것이 옳은 처사'라고 비난(10.14, 중앙통신/흑인사냥의 치욕이 새겨진 미국)
 - * 美 중학생의 총기사건(언쟁을 하던 2명의 중학생 중 한명이 상대방에게 총기 발사)을 거론하며 '이 사건은 인간중요 사상이 만연된 미국사회의 부패한 진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10.14,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인권연구협회 보고서, 10월 15일 유엔총회 및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 A/69/383-S/2014/668호 배포(10.16,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